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A는 아파트 동 대표 선거를 정치로 보지 않는 반면 B는 정치로 본다.

-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② A는 대통령 선거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③ B는 정당의 공천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④ B는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를 정치로 본다.
- ⑤ A와 B는 의회의 법률안 의결 과정을 정치로 본다.

2. 다음 사례를 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A는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B는 혼인 사기로 구류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장관인 C는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 D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공무원이 될 자격이 정지되었다.

- ① A의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부과된 것이다.
- ② B는 A와 달리 교정 시설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
- ③ C에게 내려진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 ④ D는 20년 뒤 석방되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⑤ B의 사례를 보면 여러 종류의 형벌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을 보고 <보기>에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19 혁명 이후 잠시 동안 시행되었던 지방 자치제는 군사 정권 하에서 중단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지방 선거를 시행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지방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뤄지며,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

ㄱ. ㉠과 ㉡의 모든 구성원은 주민 소환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ㄴ.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이 ㉡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ㄷ. ㉡은 ㉠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ㄹ. ㉠은 ㉡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은 갑이 A를, 을이 B를 골라 그것의 입장대로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다. 갑, 을 모두 두 개의 질문에만 옳게 답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 B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중 하나이다.) [3점]

	갑	을
범죄인에 대한 판결은 법에 명시된 대로 내려져야 하는가?	예	아니요
악법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라도 정당한가?	예	(가)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나)	(다)

- ① (나)에 '예'가 들어간다면, B는 현대에 접어들며 변화된 죄형 법정주의의 변화되기 이전 형태이다.
- ② (가)와 (다)에 모두 '예'가 들어가면 을은 2개의 질문에 옳게 답한 것이 된다.
- ③ (가)에 '아니요', (다)에 '예'가 들어간다면, A는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언으로 대표되는 개념이 된다.
- ④ (나)와 (다)에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에도 (나), (다)와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한다.
- ⑤ 만약 (나)에 '아니요'가 들어간다면, B는 독재 정권의 부당한 법에 의한 판결이라도 합당하다고 본다.

5. 다음 사례를 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A와 B는 법률혼을 맺어 함께 살고 있었다.



㉡ A가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B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구타했고, B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 A, B의 두 미성년 자녀인 C, D에 대해 C의 양육권은 A가, D의 양육권은 B가 가지게 되었다.

- ① ㉠에서 A와 B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부부 상속권을 가진다.
- ② ㉡에서 이혼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A와 B는 이혼 상태이다.
- ③ ㉡에서의 A의 행위는 명백한 민법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에서 B가 E와 재혼한다면, E는 D를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 관계를 의제할 수 있다.
- ⑤ ㉢에서 C의 친권자는 항상 A이고, D의 친권자는 항상 B이다.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6. 다음 사례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갑 (17세)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이 A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을은 갑을 별다른 통보도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해 버렸다.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였다. 을은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을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 ① 갑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 3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 ② 갑의 근로 계약서는 근로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므로 모든 내용이 무효이다.
- ③ A 노동조합은 갑이 당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지방 노동 위원회에 할 수 있다.
- ④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갑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하고 동시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도 구제 신청을 했다면,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지속된다.

7. 다음 표를 보고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단, A, B는 근대 민법과 현대 민법 중 하나이며, ㉠, ㉡은 예와 아니요 중 하나이다.)

	A	B
개인의 소유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	㉡
각 개인은 자유롭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	㉠	㉡
자신이 일으키지 않은 일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	㉡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요하다?	㉡	㉠
원칙적으로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하는가?	㉠	㉡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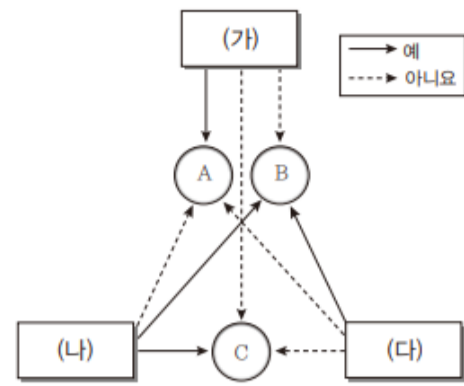
- ①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② A에서는 국가가 개인 사유지에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③ B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면 무효이다.
- ④ A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가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A, B 모두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지나는 공공 도로에 통행료를 매기는 것을 허용한다.

8. 다음을 보고 a+b+c의 값을 구하시오. (단,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수는 정원인 300명이다.)

한국 정치의 여러 면에서는 숫자들이 나타난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소 인원수는 a명이다. 헌법 개정안의 경우, b명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마지막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c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 ① 286 ② 287 ③ 335 ④ 461 ⑤ 462

9. 그림은 질문 (가)~(다)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를 구분한 것이다. A, B, C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중 하나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가)에 '국민 투표 부의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간다면, A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ㄴ. (가)에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이 있는가?'가 들어가고 (다)에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을 할 수 있는가?'가 들어간다면, C는 B의 구성원 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ㄷ. (나)에 '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지 않는가?'가 들어가고 (다)에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간다면 C는 예산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 ㄹ. (가)에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가?'가 들어가고 (다)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간다면, (나)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명령이나 규칙을 심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은 국제법의 법원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에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A, B, 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 A, B, C는 다음의 특징 유무로 분류하며, 특징의 유무는 밑의 표와 같이 표현한다.

구분	주요 사항 체결 시 국회 동의 필요 여부		포괄적 구속력 여부		반복된 관행으로부터의 유래 여부	
	표현	표현	표현	표현	표현	표현
필요	0	있음	0	해당	0	
불필요	X	없음	X	미해당	X	
양자 해당 없음	-	양자 해당 없음	-	양자 해당 없음	-	

- 이때, 다음 표는 ㉠~㉢의 기준을 토대로 A, B, C 중 2개 이상을 골라 임의로 묶어 분류한 것이다. ㉠~㉢은 상기한 3개의 특징들이다.
- 기준상 '0'에 해당하는 내용이 'X'보다 많다면 '0'로 표시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X'로 표시한다. 양자의 수가 동일하다면 '-'로 표시한다. 단, 개별 개헌안의 '-'는 위의 표현형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기준 \ 집단	A+B+C	기준 \ 집단	B+C
㉠	0	㉡	X
기준 \ 집단	A+B	기준 \ 집단	A+C
㉢	-	㉠	0

<보기>

- ㄱ. A는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명시한다.
- ㄴ. 주요 사항에 대한 C를 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
-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준거로 C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그 다음으로 B가 사용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11. <보기>는 학생이 밑의 사례를 보고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서술한 것이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이다. 학생의 점수는? [3점]

A는 B가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고가의 인형을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 그 후 A는 이 인형을 친구인 C(16세)에게 구매 시보다 5%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C는 인형을 구매했으며 그의 부모의 동의는 없었다. A와 C는 서로의 나이를 안다.

<상황>

㉠ A가 나이를 속인 경우	㉡ A가 나이를 속이지 않은 경우
㉢ C가 동의를 위조한 경우	㉣ C가 동의를 위조하지 않은 경우

학생의 답	점수
㉢의 경우 C의 부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 경우 A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의 경우 B는 A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의 경우 모두 A는 취소권을 가진다.	
㉠, ㉢의 경우 A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C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합계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갑은 을이 A를 속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도중 갑은 형법 347조에 대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B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갑은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C는 갑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 대상인 법조문에 대한 위헌 주장 없이 법조문에 관련된 판결의 결과를 다루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하였다 보았다. 그 결과 갑의 헌법 소원 심판은 각하되었다. 얼마 뒤 갑은 같은 내용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역시 각하되었다.

- ① C는 형법 347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② A가 '고등 법원'이라면, A는 모든 항소 사건 판결을 관할한다.
- ③ B는 C의 구성원 3인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지닌다.
- ④ C의 각하 결정을 위해서는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 갑의 두 번째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다.

13. 다음 (가), (나)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두 이론이다. 다음 질문들에 (가) 또는 (나)의 입장에 따라 응답한 사람은?

(가) 평등한 자, 동지의 평화만이 오래 지속된다. 평화의 대원칙은 평등하며 공통적인 복지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나) 우리에게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

	갑	을	병	정	무
국제 사회에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가?	√	√	√	√	
집단 안보 체제의 형성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인가?			√		√
군비 경쟁은 평화 유지의 효과적인 수단인가?		√		√	√
국가는 합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행위자인가?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4. 다음을 보고 <보기>에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 의회는 3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T대 갑국 의회의 정당들의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득표율)의 값을 나타낸 표이다. T대의 집권당은 A당이다.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25%	20%	15%
㉠	+5%	-10%	+10%	-5%

갑국은 T대와 T+3대까지의 기간에서 정부 형태가 1번 바뀌었다. T+1대의 정부 형태와 T+2대의 정부 형태는 다르며, 다음은 T+1대~T+3대까지의 집권당과 다수당의 의석률, 다수당과 집권당의 일치 여부이다.

시기	T+1	T+2	T+3
집권당	B당	C당	A당
다수당 의석률	35%	52%	41%
집권당-다수당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일치

<보기>

- ㄱ. T대에서는 A당을 주도로 한 연립 내각이 형성되었다.
- ㄴ. T+2대에서는 T+1대와 달리 행정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 ㄷ. T+3대에서는 연립 내각이 형성되었다.
- ㄹ. T+1대의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자료를 보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밑의 표는 <사례>에 대해 학생이 분석한 것을 채점한 자료이고, 맞는 진술은 1점, 틀린 진술은 0점이다. 다음은 <사례>이다.

<사례>

갑은 을과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생활 습관 및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둘은 협의 하에 이혼하게 되었으나,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두 성년 아들인 병은 을이, 정은 갑이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 을은 자식이 없는 무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병은 무에게 입양되었다. 3년 후 을은 교통 사고로 사망하였고 재산으로 28억 원을 남겼다. 을은 재산의 절반을 A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유언의 효력은 불명이었다.

<학생의 답안>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점
무는 병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을 수 있다.	㉠
㉡	(가)
㉢	(나)
계	㉣

* (가)와 (나)는 '0점' 또는 '1점'임.

<보기>

- ㄱ. ㉢에는 3점 이하의 점수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만약 ㉡에 '을과 무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들어가고, ㉢에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병은 4억 원을 상속받고 2억 원의 유류분을 A 재단에 청구할 수 있다.'가 들어간다면, ㉢은 '3점'이다.
- ㄷ. 만약 ㉡에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가졌다.'가 들어가고, ㉢에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갑과 무는 각각 6억 원을 상속받는다.'가 들어간다면, ㉢은 '2점'이다.
- ㄹ. 만약 ㉡에 '무는 A 재단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들어가고, ㉢에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갑은 유류분 반환 청구액과 상속액을 합쳐 9억 원을 받게 된다.'가 들어간다면, ㉢은 '3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3점]

A(16세)와 B(7세)는 (A와 B는 가족이 아니다.)친구의 어머니인 C 소유의 맹견을 빌려 데리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A와 B가 호기심에 D가 소유한 건물의 E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목줄을 풀었고, 맹견은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 F와 G를 물어 다치게 하였으며 동시에 식탁의 다리, 벽지를 훼손하고 그릇을 깨트렸다. 이로 인해 식사하던 고객들이 환불 요구를 하여 막대한 손해가 생기자 E는 분노하여 식칼을 들고 식당을 나와 A, B에게 보복하려 하였으나 A, B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그런데 E의 식당이 있는 건물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H의 창문이 깨져 E에게 항의하러 나온 고객 F, G와 E에게 유리조각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E가 부상을 입으면서 식칼을 떨어뜨렸고, 떨어진 식칼의 칼날 쪽이 G의 발등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한편, A, B는 I가 운영하는 노트북 판매점으로 갔으며, 이때 B를 바깥에 두고 A는 자신이 결혼하여 성인 의제가 되었다고 속여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노트북을 아버지에게서 훔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

- ① A의 감독 의무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 ② A는 재물 손괴죄 혐의로 검사에 의해 기소될 수 있으며, B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법원은 A에 대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H가 창문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D가 E, F, G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⑤ I는 A와의 거래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되었다.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하였다. 이후 갑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었다. 몇 년 뒤 갑은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되었고, 이후 진범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다가 ㉡현행법 체포되었다. 갑은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였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보기>

- ㄱ. ㉠과 ㉡은 모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 ㄴ. 법원은 갑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적부 심사를 기각했다.
- ㄷ.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갑은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다가 가석방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 배제함으로써 보장되는 A와 달리 B는 국가가 인간 존엄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보장된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생성. 발전되어 온 B가 확대될수록 A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A와 B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이라는 헌법 이념 아래에서 조화된다.

- ① A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B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③ B에는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개인의 양심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
- ④ A와 달리 B는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 ⑤ A와 B 모두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19.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B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 ① A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써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② A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B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B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20. 다음 자료를 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9명과 비례 대표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권자는 1표를 지역구 의원 투표에, 1표를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행사한다. 온건 진보인 A당, 강경 진보인 B당, 강경 보수인 C당, 온건 보수인 D당이 있으며, 지역구 의원으로는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1인을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음은 t대 선거 당시 갑국의 선거구 배치와 선거인 수, 그리고 선거구별 이념 지수, 정당 득표율이다. 이념 지수는 유권자 수의 오른쪽에 표시된다.

선거구 1 (200명, 60)	선거구 2 (400명, 44)	선거구 3 (200명, 48)
선거구 4 (300명, 42)	선거구 5 (300명, 52)	선거구 6 (400명, 58)
선거구 7 (200명, 54)	선거구 8 (400명, 40)	선거구 9 (600명, 48)

이념 지수는 선거구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지역구 선거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선거구의 이념 지수가 50이면 중도, 50 미만이면 보수, 50 초과이면 진보이다. 이념 지수에 따른 진보 계열 정당의 득표율은 $(25 + \frac{\text{이념 지수}}{2})\%$ 로 계산한다. 보수 계열 정당의 득표율은 100에서 이 값을 뺀 값이다. 단, 득표 수가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당	B당	C당	D당
38%	15%	13%	34%

이때, 진보/보수 계열 정당의 총 득표 수의 90%를 온건 진보/보수 정당이 확보하며 나머지 10%를 강경 진보/보수 정당이 확보한다. 갑국은 t+1대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편안>

선거구를 재획정해 5개로 만들고 득표순으로 2인을 각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선거구 통합은 인접한 선거구 간에서만 가능하며 재획정되는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동일해야 한다. 3개 이상의 선거구를 통합해 하나로 만드는 경우는 없다. 또한 비례 대표 의원을 4인 늘리고 선출 방식은 현행을 유지한다.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는 t대의 유권자 성향과 득표율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 ① 의석률이 득표율을 상회하는 정당은 현행과 개편안에서 2개이다.
- ② 현행에서는 D당이 A당보다 많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다.
- ③ C당은 개편안에서 유리하지 않고, B당은 개편안이 더 유리하다.
- ④ 개편안에서 A당과 C당의 의석률 차이는 현행에서 B당과 D당의 의석률 차이와 같다.
- ⑤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에서는 소수 정당의 발언권이 더욱 약화된다.